

R&D 예산 1~2% 뿐...광주·전남 미래 경쟁력 상실

〈연구 개발〉

수도권·충청권 77.9% 집중...중소기업 지원도 극심한 차별 전남,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유치 실패 충격 딛고 재유치 나서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 중소기업 지원 예산 등이 수도권과 충청권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이어 충청권에 대한 정부의 행·재정 투자가 집중되면서 영남권에 비해 인구·경제 규모·산업기반 등이 열악한 호남권의 소외와 미래 경쟁력 하락이 갈수록 정도가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가 충북 오창에 밀려 유치가 실패한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를 재유치하기 위해 연말까지 논리를 보완해 정부 설득에 나설 방침이어서 주목 받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 R&D 사업이 수도권과 대전에 집중 지원되고 있는데 반해 나머지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5~2019년) 과기정통부 소관 R&D 지원사업은 수도권과 대전에만 무려 77.9%가 집중됐고, 나머지 13개 광역지자체는 고작 22.1% 지원되는데 그쳤다.

최근 5년간의 과기정통부 R&D 예산은 총 33조2481억원으로, 이 중 수도권에는 30.4%인 10조1004억원, 대전에는 47.5%인 15조7877억원의 예산이 쏟아진 것이다. 나머지 13개 지역의 지원 예산은 모두 합쳐도 22.1%인 7조3600억원에 불과했다.

특히 전남, 강원 등에 지원된 예산은 5년 내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쥐꼬리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고, 부산, 울산, 충청, 전북 등도 1%대의 지원을 받는데 그쳤다. 그나마 대구, 광주, 경남 등은 2%대 지원을 받았다.

이 의원은 수도권과 대전에 R&D사업이 편중 지원되는 이유가 대학·출연연구기관·관련기업 등이 밀집해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전국에서 R&D시설이 가장 열악한 전남이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유치가 나섰으나 충북 오창이 차지하는 등 정부 공모 자체가 지역 간 격차를 오히려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연구중심대학, 국책연구기관, 관련 기관 등을 강제 분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기에 광주·전남에 있는 중소기업은 정부 지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선정 기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TIPS 선정기업의 81.1%가 서울·경기·대전에 집중돼 있었다.

전남은 0.3%(3곳)로 가장 낮았고, 광주 역시 1.8%(16곳)에 불과했다. 서울이 47.0%(428곳)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서 경기 20.0%(182곳), 대전 14.1%(128곳)이 그 뒤를 이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투자와 정부 R&D를 연계해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 활성화를 하기 위해 TIPS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처럼 정부 혜택이 큰 제도 역시 지역편중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TIPS 운영사로부터 1~2억원의 선투자를 받고, TIPS에 선정되면 최대 2년, 5억원 이내의 정부 R&D 예산을 받게 되며, 향후 최대 1억원의 창업사업화자금까지 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에게 TIPS는 선망의 대상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한전공대 명칭 '한국에너지공과대학' 확정

영문 '캡텍 KEPTECH' 유력

한전공대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윤의준)가 오는 2022년에 문을 열 대학명 최종 후보를 '한국 에너지 공과대학'으로 선정했다.

22일 추진위에 따르면 다음 달 5일 열리는 학교법인 한국전력공과대학교 이사회(이사장 김종갑)에서 대학명 '한국 에너지 공과대학' 선정을 의결할 방침이다.

추진위와 한전공대설립단은 지난 달 이름을 특허청에 상표권을 신청하고 등록 완료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추진위는 이사회 의결을 마치면 한전공대 법정부설립추진위원회에도 대학명칭을 추진 받을

계획이다.

설립단 관계자는 "대학명은 공모 형식이 아니라 컨설팅 기업에 의뢰해 나온 여러 이름 가운데 최종 후보를 결정했다"며 "한국전력" 또는 "한전" 등 특정 기업명이 대학 이름에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영문 명칭은 한전 영문명인 KEPCO와 Technology(기술)를 합친 'KEPTECH'(캡텍)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래 에너지 연구 플랫폼'을 내걸었다는 점에서 포항공대 '포스텍'(POSTECH)과 같이 '사이언스'(Science)를 포함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24절기 상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추분인 22일 오후 광주시 남구 사직전망대에서 바라본 광주 모습. 도심이 파란 하늘로 둘러싸여 가을이 왔음을 실감케한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주, 구청장 5명 전원 "시·도 통합 찬성" 전남, 시장군수 찬성 12·반대 4·유보 6명

이윤성 광주시장이 제안한 광주·전남도 행정통합에 대해 광주·전남지역 기초자치단체장 중 상당수가 찬성 입장을 보이며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에선 구청장 5명 모두가, 전남에선 기초단체장 22명 중 절반이 넘는 12명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관련기사 3면〉

광주 구청장협의회장인 문인 북구청장은 22일 시·도 행정통합과 관련해 "현재 광주지역 구청장들이 시·도통합에 찬성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24일로 예정된 광주시장과 5개 구청장 만남 자리에서 각 구청장의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필요하다면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논의를 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협의회장인 대표성을 감안해 자신의

공식 입장표명을 유보한 구청장은 "개인적으로는 좀 더 논의와 공론의 자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 시장께서 시민사회 단체와 정치권 등 각 분야에서 대표성 있는 분들을 적극 접촉하고 계시는 데, 매우 적절하고 잘 하시는 모습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지방세법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고, 중앙정부와도 광범위하고 세밀한 논의도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도민의 의사"라고 강조했다.

광주 각 기초의회는 23일 열리는 의정단 월례회에서 관련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전남 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인 유근기 곡성군수는 이날 "시·도 통합에 대해 22개 시·군 단체장 의견을 수렴한 결과, 12명의 단체장이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유 군수는 "시·도 통합 반대 4명, 나머지 6명은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며 "이는 주민 의견 수렴 이전에 순전히 시장, 군수를 개인 의견을 묻은 결과"라고 덧붙였다. 시·도통합 찬성 입장을 밝힌 유 군수는 "전남 22개 시장, 군수 의견 수렴 결과는 김영록 전남지사와도 공유했다"며 "10월 중 전남 시·군단체장 모임을 곡성에서 개최, 시·도 통합에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전남 22개 시·군의회의 10월부터 관련 논의를 본격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 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인 김정오 담양군의회의장은 "10월 중 함평에서 전남시군의회의장 협의회 정기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22개 시군의회의장님들 의견을 수렴해 관련 입장문을 내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개천절 집회 관용은 없다"

문 대통령, 강력대응 천명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일부 단체가 계획 중인 개천절 집회 등과 관련, "우리 사회를 또다시 위협에 빠트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강력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위기를 초래한 불법 집회가 또다시 계획되고 있고, 방역을 저해하는 가짜뉴스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에 힘을 모으고 있는 국민의 수고를 혼순간에 허사로 돌리는 일체의 방역 방해 행위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공동체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고 이웃의 삶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불법 집회 강행을 계획하는 분들이 있다면 부디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전날 오전까지 신고된 개천절 집회는 총 798건으로, 경찰은 이중 집결 신고 인원 10명이 넘는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를 통보했고, 집회를 강행할 경우 원천 차단·제지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국내 신규확진자 수가 3일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한 점을 거론,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서서히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면서도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고, 어떠한 경우에도 경계를 늦춰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특별방역 기간으로 설정된 추석 연휴와 관련해선 "방역 수칙과 함께하는 안전한 명절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오늘, 승촌보·죽산보 '운명의 날' ▶6면

광주FC "목표는 AFC 챔피언스리그" ▶18면



동네책방 나들이 'Dear, green'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광주형일자리 캠페인

광주형 일자리

광주형 일자리 성공으로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노사상생도시 광주" 를 실현하겠습니다.

